

독자권익위원 칼럼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중용은 ‘사서오경’에 속하는 유교의 대표 경전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녀야 할 자제와 태도를 제시한 철학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상에서 ‘중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흔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함이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뜻하는 말로 오해되고, 중용을 말하는 사람은 ‘죽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본래 중용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상황에 맞게 말과 행동을 조율하고, 적절함을 판단하는 절제의 미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나 사회의 여러 모습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중용의 철학’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조선 개국 이래 다섯 임금을 섬긴 명재상 황희 정승은 6조 판서를 두루 거친 인물로, 조선의 행정체계를 정립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청렴과 강직함, 그리고 실용적 정치철학으로 오늘날까지도 존경받고 있다. 특히 세종대왕을 보좌하며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세종의 개혁정책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준 그의 태도는 중용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현대판 중용

황희는 법과 행정 전반에서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실용성을 중시했고, 세종이 추진한 공법(전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을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의 삶을 우선하는 현실적 관점을 견지했다. 세종과의 협치와 견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군신 관계로 평가받는다.

그런 그를 두고 일부에서는 ‘우유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일화로 두 노비가 다투자 황희가 “너도 옳고, 너도 옳다”고 말하자 이를 본 부인이 “죽대가 없다”고 꾸짖었고, 그는 “그 말도 옳다”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정의 충동을 피하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화의 미덕’을 보여주는 일화로 읽어야 한다.

또한 어느 날 시골길을 걷던 황희가 밭에서 일하던 누런 소와 검은 소를 본 노비가 “둘 중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나까?”라고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짐승도 다 알아듣는다. 잘잘못을 큰소리로 말하면 서운해한다”고 답했다. 짐승에게조차 배려를 베푸는 그의 태도는 중용의 정신이 생활 속에 녹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중용의 사상은 비단 동양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양에서도 플라톤은 “아다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하며, 크기의 양척 기준이 아닌 가치의 질적 균형을 중용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지나침과 부족함은 모두 악덕이며, 그 사이의 중간을 찾는 것이 참된 덕”이라고 했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 역시 현실 속 행실의 최선의 길을 뜻하며,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출발해 가치론적 수양법

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이는 ‘절대적인 중간값’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상대적 가치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면,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정도로 극단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 지도층의 내로남불적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공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는 결국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기후위기, 복지, 경제, 젠더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주장보다 현실과 원칙을 아우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환경과 경제, 성장과 분배, 자유와 책임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중용의 정치이며, 그 속에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함께 모색하는 지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경제적 성취만으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좌우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중용의 정신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선대가 물려준 귀중한 자원과 정신을 지켜내고, 이를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대적 ‘중용’의 길일 것이다.

기고

정성욱

목포농협 융해지점장



“변화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규칙이 시대를 따라 바뀔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음식 값이다.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였던 자장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시대의 거울이자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1990년대 초반 자장면 한 그릇은 1000원 남짓이었다. 1990년 평균 가격은 1073원으로 처음 1000원을 넘어섰고, 1995년에는 2176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00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불과 10여년 만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음식 값 상승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원자재 가격 변동, 외식 산업의 변화,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결과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자장면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2003년 3083원, 2011년 4220원, 2018년 5011원, 그리고 2025년 현재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500~7500원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말 전국 평균은 약 7000원대 초반, 서울은 75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인 경북과 부산도 6200원대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무려 6~7배 이상 오른 셈이다.

자장면 가격의 변화는 단순한 외식 물가의 변동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 생활비 부담, 그리고 서민 삶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자장면과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그리고 민주주의

다. 더 이상 자장면은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만 불리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게 문득 떠오른다. 바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다.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으로서 여러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유독 정치자금 기부금 전액 공제 한도가 20여년째 변함없이 10만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혈액과도 같다. 국민이 낸 세금 만으로는 정치의 다양성과 활력을 담보하기 어려워 1972년 정치자금법 제정과 함께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불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과 기업·개인의 비공식 후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민이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세계

혜택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1990년대 후원회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활성화됐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제공됐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동시에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제도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까지 공제되며, 지방소득세에서도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즉 10만원을 낸 사람은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다. 문제는 이 한도가 수십 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장면 값이 30년 사이 6~7배나 올랐듯이, 국민의 생활비와 물가 부담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액은 여전히 10만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이 정치자금 기부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세제 혜택의 한계로 인한 실익성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액, 특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최소 20만원, 나아가 3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공제액 확대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혜택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이며, 정치권이 특정 기업이나 거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더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작은 금액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내 한 표가 곧 내 한 톨의 후원으로 이어진다’는 실질적 체감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특히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원, 30만원으로 높인다면, 더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정치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곧 정치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 변화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의 사회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제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국민이 더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액 확대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참여를 넓히고, 정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희망의 제도다. 이제는 제도가 국민의 삶을 따라가야 할 때다. 자장면 값이 오르는 만큼,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길이다.

취재수첩

상시 운영 ‘배리어프리존’ 생겼으면

정재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별종위기의 고라니. 화면 한 가운데에서 축축한 눈망울로 정면을 응시하는 고라니와 눈맞춤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레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작품 옆에 마련된 촉각 작품에 손을 대면 고라니의 얼굴이 만져진다. 오디오 해설 헤드셋을 착용하면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각자 해석한 작품의 내용이 각각 흘러나온다.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달큰한 향기가 난다. 대체로운 색깔의 비누로 만들어진 조각 작품이

다. 전시장 한 쪽에서는 천사 형태의 비누로 직접 손을 씻고, 다양한 소재의 조각작품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광주점자도서관과 협력해 만든 전시장 지도와 설명서, 전시의 이해를 돕는 수화 해설 영상도 마련돼 있다. 이강하미술관이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사업으로 마련한 기획전 ‘모두의 미술, 소리와 미술관’ 전경이다. 문선희 작가의 ‘고니’와 신미경 작가의 ‘로맨틱 조각’은 예술이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준다.

몇년 사이 문화예술계에서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수어통역과 음성해설, 터치투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만큼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장애인 모두를 아우르는 시도가 활발하다

는 의미일 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접근성 감각 투어’를 기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ACC 향기투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ACC 정형투어’를 통해 관람객들의 공감대를 넓혔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세광학교 시각장애인 학생을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전시 관람 실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한 영화 ‘힘을 낼 시간’과 ‘판공정 예어컨’을 상영했다.

누구나 제약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 배리어프리 문화예술행사 혹은 서비스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시 운영돼야 하는 이유다. 배리어프리를 내세운 문화예술행사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극을 돕는 행사는 늘어났지만, 상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간의 시간과 경력이 축적돼 배리어프리존, 배리어프리 공간이 생겨나길 바란다.

사설

정부 ‘해상풍력 활성화’ 서둘러야 한다

해상풍력은 대표적 미래성장산업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특히 고품화·산업구조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전남은 이 산업의 중심지다.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의 3분의 1(125GW)이 있는데다 실제 전국 해상풍력 허가 물량의 60% 이상이 집중돼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최근 발간한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인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달성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일부 보고서도 정부의 목표 달성 시 최대 77만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하다는 얘기다.

전남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 연평균 풍속 7.2%, 수심 40m 이내의 얕은 해역, 6500km에 달하는 해안선 등 천혜의 입지 여건에다 조선, 해양플랜트, 기계산업 등 기존 제조 인프라산업과 결합도 가능하다. 해상풍력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췄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지정한 ‘신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곳은 총 설비용량 3.2GW, 민간투자 20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단일 해상풍력 단지인데 10개 세부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기자재·설치·운영 기업을 지역에 유치,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단순 발전사업이 아닌 도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키로 했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16GW 등 총 2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조성, 연간 1조원 규모의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인만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우선 육상풍력 대비 높은 투자비와 발전단가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기술 개발, 대형화,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 절감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배후항만 확충, 송전망 조기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광주 서구 ‘골목경제 119’ 지역경제에 활력

광주 서구의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이의 시행으로 주민 생활비가 100억원 이상 절감됐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구에서 발행된 은누리상품권은 총 524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 36억원 대비 14.5배인 48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상품권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서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 18개 동 119개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까지 모든 지역의 상점가 지정을 마무리한 뒤 7월부터 구청장 집무실에 ‘골목경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상인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는 ‘골목경제119폰’ 개설, 18개 동 순회 골목집무실 운영 등 골목형 상점가 안착을 위해 올인했다.

무엇보다 은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디지털 은누리 상품권은 충전 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데 차액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 부담 없이 주민 생활비 절감과 상인들의 매출 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서구는 지난 6~9월까지 10%페이백 이벤트 행사까지 펼쳤다. 기본 10% 할인에 추가로 10% 할인이 병행한 것으로 이 기간 주민들의 골목형 상점가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구측은 ‘골목경제119’ 시행으로 주민 생활비 100억원이 절감됐다고 보고 있다. 즉 전체 발행액이 524억원인데 이중 20%가까이 가 할인이 돼 주민들이 이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매출도 20~30%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구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5% 추가 페이백 행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정책은 현재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이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매출-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최종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10			논 설 실 370-7060
대표전화 (062) 370-7000			경 제 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팩스 (062) 385-5400			사회교육부 370-7030			임 원 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